

한국 노년층, 소득대비 부채비율 ↑

한은 “연금제도 선진국에 비해, 발달 되지 않아 실물자산 축적 대응 모습 보여”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 대비 빚 부담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가계는 은퇴할 나이가 돼서도 빚을 제때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세대별 가계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경장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2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70% 안팎, 유럽은 2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별 특징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유럽 모두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졌다가 노년층에 진입하

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노년층들의 주택 등 실물자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라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특수한 형태도 노년층의 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임대주택을 보유한 가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8%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충분히 발달

돼 있지 않아 민간에서 실물자산 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 가계의 부채 조정이 보다 늦은 나이대에서 이뤄지는 요인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50대 중반부터 가계부채를 축소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정이 70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채상환 후 생활여력(총자산-총부채)+가치분소득을 보면 타 연령층에 비해 노년층이 특히 하위(1~2)분위에 집중돼 있다.

축적된 실물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낮은 유동성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 안정성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융자산과 가계부채간 상관관계로 보면 금융자산은 적으면서 부채는 많은 가계가 노년층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노년층에서 금융자산 하위층(1~2분위)이 가진 가계부채는 전체 노년층 부채의 37% 수준으로 전 연령대 평균(2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은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노년층의 부채 확대 및 실물자산 의존도 심화라는 리스크 확대에 유의해 정책적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



시와 빅스비 적용... 2018년형 '무풍에어컨' 삼성전자가 24일 더욱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과 빅스비 적용으로 사용자 환경을 24시간 감지해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 2018년형 '무풍에어컨'을 출시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2018년형 '무풍에어컨'의 차별화된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작년 '원산지 품수' 단골 품목은?

농관원, 돼지고기1202건 · 배추김치1187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단골 품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23만 3천 351곳에서 47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적발된 업체 수는 7.8%(332곳), 위반 건수는 5.3%(274건) 각각 감소한 것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6월부터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5배(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5년 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유통했다가 적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도 매긴다.

2014년 112개 품목에 불과하던 원산지 감정법은 지난해 134개까지 개발·활용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63.8%(2522곳)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형사입건 및 고발 조치됐다. 나머지 36.2%(1429곳)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총 4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중국산육을 국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농산물이었다.

미국산육을 국산으로 둔갑한 사례는 272건이었다. 멕시코산과 호주산육을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는 각각 142건, 102건이었다. 대부분 축산물이었다는데, 이들 3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육류 비중은 전체 수입 물량 89만16000t의 61%(54만15000t)에 이른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202건(허위 표시 864건·미표시 3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추김치도 1187건(허위 표시 968건·미표시 219건)에 달했다.

최고기 559건(허위 표시 363건·미표시 196건), 콩 213건(허위 표시 91건·미표시 122건), 닭고기 181건(허위 표시 81건·미표시 100건), 쌀 118건(허위 표시 13건·미표시 105건), 떡류 93건(허위 표시 47건·미표시 46건), 한약재류 75건(허위 표시 49건·미표시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일반음식점(2191곳·56%)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뒤이어 식육판매업(488곳), 가공업체(357곳, 노점상 112곳, 슈퍼104곳) 등의 순이었다. /뉴스

작년 담배 판매량 35억2000만갑... 전년비 3.8% ↓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 도입 효과가 가시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갑으로 전년(36억6000만갑) 대비 3.8% 감소했다.

담배 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만갑에 달했으나, 가격이 큰폭 인상된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줄었다. 2016년 36억6000만갑으로 다시 증가했다가 경고그림이 도입된 이후 다시 판매량이 감소한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전인 2014년 대비로는 19.2% 감소해 담뱃값 인상 및 흡연 경고그림 도입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

했다.

반면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의 성장세는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신규 출시된 권련형 전자담배는 12월까지 8000만갑이 팔렸다. 전체 담배 판매량의 2.2%에 달하는 숫자다.

한편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약 11조2000억원으로 전년(12조4000억원)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권련 담배를 통한 세수는 11조원으로 1년 사이 1조4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권련 반출량이 전년 대비 판매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내 담배 3사가 잇따라 출시한 권련형 전자담배를 통해 약 2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

이스타항공, 웰페어클럽 서비스 시작

이스타항공이 웰페어클럽 서비스를 시작했다.

웰페어클럽은 공무원연금공단·삼성그룹·군인공제회 등에서 관리하는 복지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휴 서비스로 포인트 사용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용방법은 온라인 웰페어클럽 회원사 소속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가 충전된 복지카드로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결제를 진행하면 2% 청구할인이 적용된다.

이스타항공은 복지고객 및 법인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해 많은 웰페어클럽 회원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웰페어클럽 내에는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소림, 도서, 음식, 호텔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만 여가 기쁨점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웰페어클럽 제휴를 통해 신규고객 창출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복지포인트로 항공권도 결제하고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웰페어클럽 서비스를 통해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휴가를 계획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전기차보조금 잡아라’

정부, 보조금 지원 2만대 결정... 사전계약 속도경쟁 벌여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가 2만대로 결정된 가운데 완성차 업체가 ‘사전계약’에 나서며 속도경쟁을 벌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현대차 코나 전기차 ‘아이오닉’, ‘코나’ 전기차, 한국지엠이 ‘볼트’ 전기차에 대한 사전예약을 실시, 1만9000대 이상의 차량을 계약했다.

15일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한 현대차 코나 전기차(EV)는 19일까지 닷새 동안 1만2000대 예약판매를 달성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였던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역시 같은 기간 2400대 이상 예약했다. 한국지엠 볼트EV 사전예약을 실시, 3시간만에 5000대를 완

사실상 합쳐서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를 2만대로 전년 1만4000대보다 42.9% 늘리고,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도 196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22.4% 증액했다. 차량별로 배터용량, 주행거리(연비) 등에 따라 1017만~1200만원을 받는다. 지방보조금(지자체별 500만~1000만원·평균 600만원)을 합치면 약 1600만~1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대수를 늘리기는 했지만 이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조사한 수요 4만9000대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업체간의 속도 경쟁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는 통상 4000만원대이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2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며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보조금 지급대수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이대로라면 완성차 업체도 소비지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눈치케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